

이철희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변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구변화의 파급효과 가운데 하나는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이다. 이 강연에서는 인구변화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내용

- 인구변화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 청년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해소 방안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균형 대응 방안

장차 노동인구는 얼마나 빠르게 감소할까? 인구변화는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지표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규모를 살펴보고, 노동인구의 생산성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의 집계적인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인력유형별, 부문별 노동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래의 인구변화가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보자. 2070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연령별·학력별로 추정해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은 낮은 반면 장년과 노년은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동인구도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과 인적자본의 개선은 전체 노동인구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보다 노동인구가 더 느리게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나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도입한 분석 결과,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면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5~20년 동안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연장이나 대규모 이민자 도입 등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당장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인구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까운 장래에는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은 출생 코호트 간 불균형과 부문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중요한 노동시장 불균형 요인은 청년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가장 최근에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지식과 숙련을 보유한 인력인 젊은 취업자들은 학습능력, 적응력,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다. 이들의 수적인 감소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대학 인구경제학연구소 연구원과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생애에 걸친 건강의 결정요인,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고령노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의 요인과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고령노동』 등이 있고,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약 90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청년인구의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산업이나 직종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근래에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빨랐으며, 평균적인 숙련 수준과 일자리 질이 높은 사업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안의 하나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약 20년 동안 진행될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젊은 취업자의 빠른 감소인데, 고용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이 든 취업자가 늘어나더라도 업종과 숙련의 차이 때문에 줄어드는 젊은 노동인구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불균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구변화의 시간적인 추이와 각 분야별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장래에는 총량적인 노동공급 증가보다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력 유형, 부문,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청년인구의 상대적인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본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문 간 노동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식, 정보, 숙련 등을 빠르게 습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력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와 4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시장의 채용 및 훈련 시스템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교육·훈련 및 채용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사업체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재교육·훈련·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구인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직·전직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노동인력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현구성 지원정책과 추가적인 보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더라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인적자원 정책은 단기적인 양적 고용제고보다는 2040년 이후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노동인력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이후의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는 최근에 들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5년 혹은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정책적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시
2023년 4월 17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협의하지 않은 사진,영상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